

무엇이 '삶의 질' 을 결정하는가?

OECD 'Better Life Index' 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및 국제 비교

What Determines Well-be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Estimation and Cross-Country Comparison Using OECD 'Better Life Index'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한국의 소득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삶의 질' 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1]을 보면, 1970년 이래로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 PPP기준 1인당 GDP는 1970년 OECD평균이 14,228달러, 한국이 2,432달러로 5.9배에 달했으나,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2년 OECD평균이 31,252달러, 한국이 27,991달러로 1.1배에 불과하다. 특히 EU-28개국은 2012년 27,717달러로 한국이 이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이다(그림 2 참조). 삶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 수준이 OECD 평균 6.64p로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6.0p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그리스, 터키 등과 함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하위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삶의 질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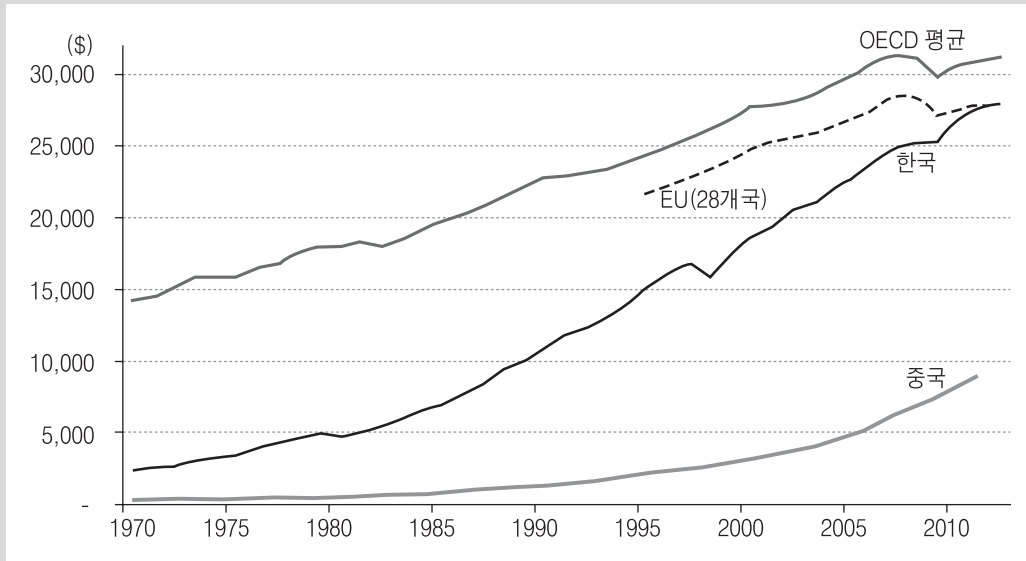
본고는 OECD에서 발표한 Better Life Index(2014)¹⁾를 활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모형을 추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현재를 확인하고,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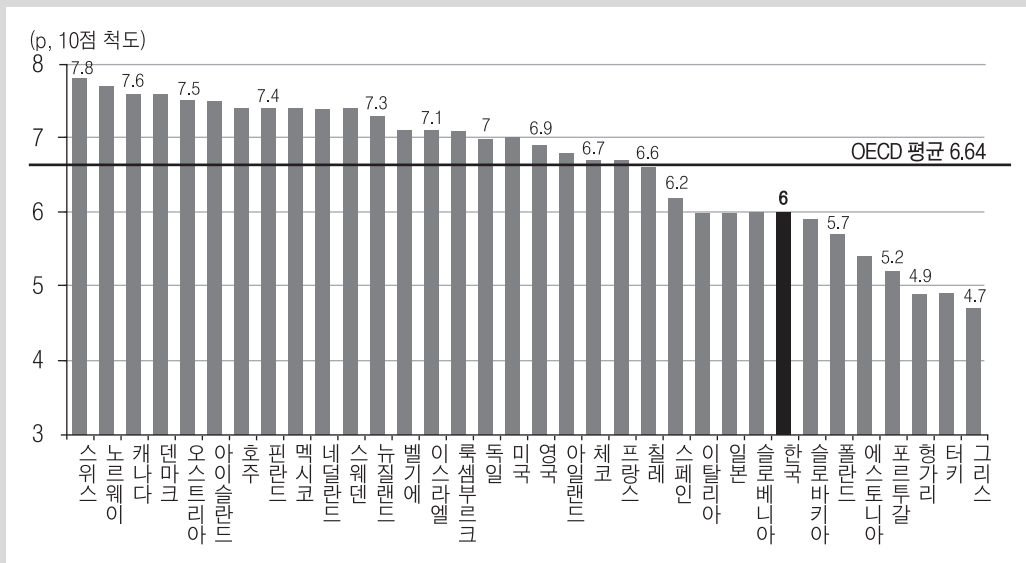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은 총 34개국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미국이 있음.

그림 1. 1인당 GDP 국제비교(PPP기준)



자료: OECD.

그림 2. '삶의 질' OECD 국제비교



자료: OECD(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영역들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그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정책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근로조건과 교육수준은 외재변수(external variable)로 설정하고, 일과 삶의 균형, 건강수준, 소득수준, 주거의 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측정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일과 삶의 균형, 건강수준, 소득수준,

주거의 질, 교육수준을 구성하는 각각의 분석지표들의 Cronbach' α 및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모두 0.7 이상으로 산출되어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은 각 잠재변수와 측정지표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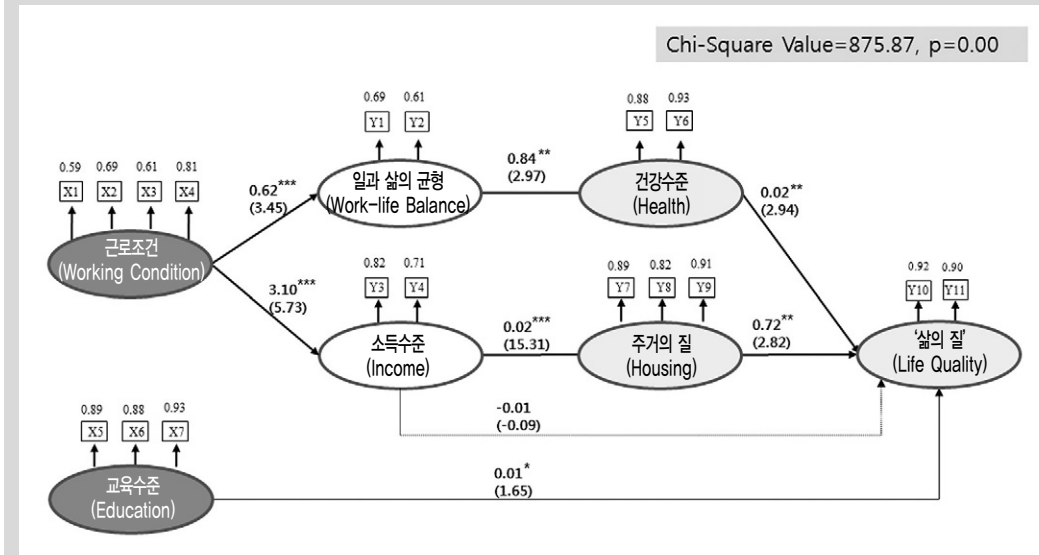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각각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형 추정 결과는 [그림 3]과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1. 측정지표 및 신뢰도 분석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측정지표 (indicators)	신뢰성 분석(Reliability Test)	
		Cronbach' α	AVE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 비중	0.719	0.743
	- 개인 소득		
	- 고용률		
	- 장기실업률		
일과 삶의 균형	-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의 비중	0.862	0.825
	- 하루 평균 레저/개인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건강수준	- 개인의 인식된 건강수준	0.821	0.792
	- 기대수명		
소득수준	- 가구당 순조정가처분소득	0.843	0.823
	- 가구당 순금융자산		
주거의 질	- 기초시설이 없는 거주자의 비중	0.713	0.721
	- 1인당 방 수		
	- 가구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용 지출액 비중		
교육수준	- 학생 학업성취도(PISA 평균성적)	0.736	0.733
	- 교육이수 수준(학사 학위 비중)		
	- 교육기간		
삶의 질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0.882	0.842
	- 개인이 인식한 삶의 질적 수준		

주: Cronbach' α 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0.7 이상 초과시 신뢰도 확보(Carmines and Zeller, 1997; Nunnally, 1978).

그림 3. '삶의 질' 영향요인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



주: 1) X1, X2, ... X7, Y1, Y2, ... Y11은 각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측정지표(indicator)임.
 2) ***는 0.01, **는 0.05, *는 0.10의 유의수준에서 채택.

표 2.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

경로(paths)	path coefficient	t-value
근로조건 → 일과 삶의 균형	0.619	3.451 ***
근로조건 → 소득수준	3.098	5.730 ***
일과 삶의 균형 → 건강수준	0.837	2.965 **
소득수준 → 주거의 질	0.021	15.308 ***
건강수준 → 삶의 질	0.023	2.942 **
주거의 질 → 삶의 질	0.723	2.821 **
소득수준 → 삶의 질	-0.009	-0.090
교육수준 → 삶의 질	0.011	1.649*
Model Fit Index		
Chi-square		875.874
d.f.		110
GFI(Goodness of Fit Index)		0.754
CFI(Comparative Fit Index)		0.711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218

주: ***는 0.01, **는 0.05, *는 0.10의 유의수준에서 채택.

본 결과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높은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건강한 삶(Health)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어, 고용시장에 많은 취업자를 진입시키고 있지만, 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후퇴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높은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은 소득수준(Income)을 높이고, 나아가 주거의 질(Housing)을 개선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소득수준(Income)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유의하지 않아,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떨어짐을 반증한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국민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은 함께 향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본 관계는 소득수준이 증대되어 주거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의 질은 가정 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소득수준이나 주거의 질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로 교육수준(Education)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 인간의 '삶'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계층별-지역별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없이, 충분한 교육이 분배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3. '삶의 질' 결정요인의 OECD 주요국 비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지표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현재를 확인해 보았다. 근로조건, 일과 삶의 균형, 건강수준, 소득수준, 주거의 질, 교육수준을 설명하는 분석지표들을 OECD 주요국들 및 OECD 평균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OECD 34개국 중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은 스위스와 주요 경제적인 비교대상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설정하였다.

1)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

먼저, 고용보장(Job security)에 있어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 비중이 24.3%로 OECD 평균인 10.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 비중이 가장 높은

터키(25.8%)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약 2,090 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5시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2,226시간)와 함께 OECD 국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고용률(Employment rate)은 한국(64%)이 OECD 평균인 65%를 소폭 하회하여, 위 두 지표를 만회하고 있다. 넷째, 장기실업률(Long-term unemployment rate)에 있어서도 한국(0.01%)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삶의 질이 다소 높게 평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안정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강과 가정, 여가활동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과 삶의 균형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인 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장시간 근로자 비중(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이다. 주당 5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27.13%로 OECD 평균인 8.82%를 크게 초과하고, 터키(43.29%)와 멕시코(28.77%)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안정한 근로조건은

표 3. 고용보장과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주요국 현황

국가	고용보장		근로시간	
	%	순위	시간	순위
미국	11.4	27위	1,790	25위
일본	10.5	21위	1,745	21위
독일	8.3	13위	1,397	2위
스위스	8.4	14위	1,636	10위
영국	6.8	5위	1,479	4위
프랑스	9.3	17위	1,654	12위
한국	24.3	33위	2,090	33위
OECD 평균	10.5	-	1,765	-

표 4. 고용률과 장기실업률 주요국 현황

국가	고용률		장기실업률	
	%	순위	%	순위
미국	67	15위	2.36	19위
일본	71	12위	1.67	13위
독일	73	6위	2.52	20위
스위스	79	2위	1.48	10위
영국	71	12위	2.75	21위
프랑스	64	20위	3.98	25위
한국	64	20위	0.01	1위
OECD 평균	65	-	2.73	-

주: 1) 고용보장은 임금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 비중.
 2) 장기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자 상태인 인구의 비중을 의미.
 3) 가장 긍정적인 것을 1위로, 가장 부정적인 것을 34위로 변환.
 자료: OECD(2014).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게 만들고,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시킨다.

둘째, 여가/개인사 사용 시간(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운동, 오락 및 문화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짧아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를 보인다. 한국의 평균 여가/개인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약 14.6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4.97시간을 하회하고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문다. 여가/개인사 사용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긴 근로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할 경우 문화·오락·체육 활동이 매우 적은 편이다. 고용보장 등 근로조건이 미흡하여 절대적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해야 하고, 여가 활동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3) 건강 수준(Health)

한국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첨단 의료기술 및 식·의약품, 공중보건제도 보급 등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 보다도 다소 긴 편이다. OECD 국가들 중 14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의 인식된 건강수준(Self-reported health)에 있어서 한국은 기대수명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중은 한국이 37%로 OECD 평균인 69%를 크게 못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33위로 30% 수준인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건강한 삶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국의 기대수명은 높은 편이지만 건강

표 5. 장시간 근로자 비중 주요국 현황

국가	비중(%)	순위
미국	11.44	24위
일본	22.62	31위
독일	5.60	13위
스위스	7.30	19위
영국	12.27	25위
프랑스	8.71	22위
한국	27.13	32위
OECD 평균	8.82	-

표 6. 여가/개인사 사용 시간 주요국 현황

국가	시간	순위
미국	14.27	30위
일본	14.93	17위
독일	15.31	7위
스위스	14.98	13위
영국	14.83	22위
프랑스	15.33	6위
한국	14.63	23위
OECD 평균	14.97	-

- 주: 1) 장시간 근로자는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를 의미.
 2) 여가/개인사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여가/개인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
 3) 여가(leisure)는 운동, 구보, 오락, 문화 활동,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낮잠 등을 포함하고, 개인사(personal care activities)는 잠, 식사, 병원 방문, 미용실 방문, 여행 등 포함.
 4) 가장 긍정적인 것을 1위로, 가장 부정적인 것을 34위로 변환.

자료: OECD(2014).

표 7. 기대수명 주요국 현황

국가	수명(년)	순위
미국	78.7	26위
일본	82.7	3위
독일	80.8	18위
스위스	82.8	1위
영국	81.1	16위
프랑스	82.2	6위
한국	81.1	14위
OECD 평균	80.1	-

표 8. 개인 인식된 건강수준 주요국 현황

국가	비중(%)	순위
미국	90	1위
일본	30	34위
독일	65	23위
스위스	81	7위
영국	78	10위
프랑스	68	20위
한국	37	33위
OECD 평균	69	-

주: 1) 개인 인식된 건강수준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중을 의미.

2) 가장 긍정적인 것을 1위로, 가장 부정적인 것을 34위로 변환.

자료: OECD(2014).

수명²⁾(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이 낮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4) 소득 수준(Income)

소득 수준은 주거의 질과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물질균형모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소비를 통해 만족된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을 소비함으로써 인간은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바,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 수준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지표인 것이다. 먼저, 가구당 순조정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구소득은 여전히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가구

당 순조정가처분소득은 PPP기준 18,035달러로 OECD 평균인 23,938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26위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근로 조건은 낮은 가구소득으로 연결되고, 소비 위축과 낮은 만족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둘째, 가구당 순금융자산(Household net financial wealth)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가구당 순금융자산은 중하위권에 속한다. ‘축적된 소득’을 의미하는 가구당 순금융자산은 한국이 28,290달러로 OECD 평균인 42,903달러에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19위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2) 세계보건기구(WHO)가 종래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수명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병이나 부상 등의 ‘평균장애기간’을 차감한 기간임. 즉, 질병의 경중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았던 햇수를 산출, 이를 전체 평균수명에서 뺀 것으로 사망 시까지 순수하게 건강한 삶을 살았던 기간을 말함.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보다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지표로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음.

표 9. 가구당 순조정가처분소득 주요국 현황

국가	소득(\$)	순위
미국	39,531	1위
일본	25,066	6위
독일	30,721	6위
스위스	30,745	5위
영국	25,828	13위
프랑스	29,322	8위
한국	18,035	26위
OECD 평균	23,938	-

표 10. 가구당 순금융자산 주요국 현황

국가	자산(\$)	순위
미국	132,822	1위
일본	85,309	3위
독일	49,484	12위
스위스	100,812	2위
영국	60,065	7위
프랑스	47,668	14위
한국	28,290	19위
OECD 평균	42,903	-

주: 1) PPP 기준.

2) 가구당 순조정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자산처분이나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

3) 가구당 순금융자산은 현금과 저축성 예금 뿐 아니라 화폐용 금, 증권, 지분 등을 포함.

자료: OECD(2014).

5) 주거의 질(Housing)

주거의 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로,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먼저, 기초시설이 없는 거주자의 비중(Dwelling without basic facilities)을 살펴보자. 실내 수세식 화장실과 같은 기초시설 보급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기초시설이 없는 거주자의 비중은 한국이 4.2%로 OECD 평균인 2.1%를 크게 초과한다.

둘째, 1인당 방 수(Rooms per person)를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은 주거의 질이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한국은 1인당 소유한 방 수가 1.4개로 OECD 평균인 1.6개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셋째, 주거비 비중(Housing expenditure)의 차원에서는 한국의 주거의 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총 가처분 소득중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한국이 OECD 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총 가처분 소

득중 16%를 주거비 지출로 사용하고 있어, OECD 평균인 21%를 크게 하회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들도 위 분석결과를 반증해 준다(OECD, 2011; Eurostat, 2013).

6) 교육 수준(Education)

교육은 직업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은 교육수준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성장배경 중 하나는 교육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교육이수 수준(Educational attainment)을 살펴보면, 한국은 학사학위 소지 비중이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25~64세 인구 중 학사학위를 소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1%로 OECD 평균인 75%를 상회하고 있다. 교육은

표 11. 기초시설이 없는 거주자의 비중과 1인당 방 수 주요국 현황

국가	기초시설 無		1인당 방 수	
	%	순위	개	순위
미국	0.1	4위	2.3	2위
일본	6.4	31위	1.8	15위
독일	0.9	20위	1.8	15위
스위스	0.1	4위	1.9	11위
영국	0.3	10위	1.9	11위
프랑스	0.5	14위	1.8	15위
한국	4.2	28위	1.4	25위
OECD 평균	2.1	-	1.6	-

표 12. 주거비 비중 주요국 현황

국가	주거비 비중(%)	순위
미국	19	5위
일본	22	24위
독일	21	14위
스위스	23	28위
영국	24	30위
프랑스	21	13위
한국	16	1위
OECD 평균	21	-

주: 1) 실내 수세식 화장실을 기초시설로 가정함.
 2) '방'에는 부엌, 화장실, 창고방, 사무실, 가게 등은 제외.
 3) 주거비 비중은 총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4) 가장 긍정적인 것을 1위로, 가장 부정적인 것을 34위로 변환.
 자료 : OECD(2014).

'삶'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수단으로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여진다.

둘째, 교육 기간(Years in education)을 보아도 한국은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평균 교육 기간은 한국이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7년을 소폭 하회한다. 공교육과 대학진학 및 평생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학생 학업성취도(Student skills)의 경우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OECD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PISA)을 통한 학생의 평균 성적이 한국은 537점으로 OECD 평균인 497점을 크게 상회한다. 한국의 학생 학업성취도는 일본(538점)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한국이 OECD 국들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변수는 몇 가지로 한정된다. 그 몇 가지는 근로조건 개선, 일과 삶의 균형, 교육수준 증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된다. 따라서 위 3가지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코자 한다. 먼저,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조건은 일과 삶의 균형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책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조건이 낮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

표 13. 교육이수 수준 주요국 현황

국가	학사학위 비중		교육 기간	
	%	순위	년	순위
미국	89	4위	17.1	21위
일본	93	1위	16.2	30위
독일	86	9위	18.1	11위
스위스	86	9위	17.1	21위
영국	77	18위	16.6	26위
프랑스	72	24위	16.5	27위
한국	81	17위	17.5	17위
OECD 평균	75	-	17.7	-

표 14. 학생 학업성취도 주요국 현황

국가	점수(점)	순위
미국	494	21위
일본	538	1위
독일	514	10위
스위스	515	11위
영국	505	14위
프랑스	499	16위
한국	537	2위
OECD 평균	497	-

주: 1) 학사학위 비중은 25~64세 인구 중 학사학위 소지 비중을 의미.

2) 학생 학업성취도는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의 평균 성적을 의미.

자료 : OECD(2014).

일근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분배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높은 비용 문턱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도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해 하겠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수준 시스템 정비 및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은 정신적 자기만족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나아가 직업선택 및 소득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교육기회가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주어지지 않도록 교육 분배 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하여 학습 희망자가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득과 건강도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소득에 기반 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여 진다. 보건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가 온 국민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돌아갈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